Kobe University Repository : Kernel

PDF issue: 2025-07-15

도시/대학의 지배 구조와 청년 지원 : 공립 대학 (서울시립 대학교) 학비 반액화를 둘러싸고

신도, 효우

(Citation)
日韓シンポジウム,第5回:1-23

(Issue Date)
2017-02-11

(Resource Type)
conference object

(Version)
Version of Record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90006953

도시 / 대학의 지배 구조와 청년 지원
- 공립 대학 (서울 시립 대학교) 학비 반액화를 둘러싸고

2017년2월11일(토)13:00－17:00 포레스트 혼고(도쿄)

- 사　　회 : 와타나베(고베 대학교)
- 제 1보고 : 박거용 (상명 대학교, 대학교육연구소 이사장)
- 제 2보고 : 정병호(서울 시립 대학교)
- 지정토론 : 신도 효우(쓰루 문과 대학교, 도쿄 자치 문제 연구소 이사장)

목차

- 자기 소개 3페이지
- 일본의 학비 무상화에 관련된 신문 기사 10페이지
- (참고) 수도대학 도쿄에 대하여 17페이지
- 학비 반액화의 경제▪사회적 배경 19페이지
- 학비 반액화의 3가지 인풋 22페이지
- 학비 반액화의 3가지 행정적 제도 23페이지
- 학비 반액화의 2가지 재정적 제도 24페이지
- 학비 반액화의 3가지 아웃풋 27페이지
- 학비 반액화의 정치력 관계 28페이지
- 토론 31페이지

자기소개 1　　신도 효우（進藤　兵）

- 정치학 전공　Research interests :
- 국가이론
- 도쿄도 정사,　　특히 1967－79년 미노 베(美濃部) 혁신 도정과 이후의 정치 변동
- 일본 지방 자치
- 일본정치,　　특히 신자유주의시대의 복지국가 재건의 가능성／
  21세기「새로운 전쟁의 시대」에서의 평화국가의 가능성
- 비교 도시 정치　그리스 SYRIZA정권／스페인 PODEMOS／런던 노동당 시정（2000－08、2015－）／
- 베를린「적적녹」시정（2016－）등／서울・박근혜 시정（2011－）
- 2016년 9월, 교원・학생들과 서울시정 조사
  서울시청／서울시「청년 허브」／함께 민주당 의원／정의당 본부・성미산「민중의 집」／
  한국 청년 커뮤니티 유니온／복지국가협회

→2017년에도 서울 시정 조사 예정

자기소개 2

쓰루 문과 대학은?

- 1953 년 야마나시 현립 임시 교원 양성소로 출범하여 1955 년에 쓰루 시립 단기 대학, 1960 년에 4 년제 대학으로 승격. 쓰루시 (야마나시현에 위치한 인구 3 만명 이상의 지방 소도시)이 설치한 공립 대학이었다.
- 학생의 내역은, 쓰루시 출신은 몇 % 정도, 야마나시현 출신이 10-20 % 정도, 나머지는 전국에서.
- 문학부 한정의 단과 대학. 초등 교육학과, 국문학과, 영문학과 → 1987 년 사회학과 (현대 사회 전공 / 환경 커뮤니티 전공, 2007 년부터) → 1993 년 비교 문화학과 → 1995 년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치.
- 한 학년 약 750 명, 총학생수가 3 천여 명, 교원이 약 80 명, 일반 직원이 약 70 명 정도. (쓰루시 파견 직원 약 35 명, 법인 직원 약간명, 비상근 직원 30 명 정도), 교수회 자치가 발달, 학부/원생 자치회 · 직원 조합도 활발.
- 졸업생의 30 %는 초 · 중 · 고교 교원, 10 %는 대학원 진학, 10 %는 공무원, 50 %는 민간에 취직.
- 2009년 공립 대학 법인으로 전환 (Agencification) ← 2003년 국립 대학 법인법 (2004년 국립 대학의 법인 전환)

  같은 해 지방 독립 행정 법인법 제7장 (공립 대학 법인으로의 전환)

※ 2016년말 현재, 88개 공립 대학 중 법인화 된 곳이 72교(도도부현 47, 시 22 등), 공영 상태 유지 16교

자기소개 2 – 2

- **쓰루 문과 대학 법인화 이후의 변화 ー ー "대학다움 '의 상실**

1 . 이사장 (시에서 임명) · 학장 · 부학장 (이사장이 임명)에 대한 권한 집중
⇔ 교수회 자치 ·학과 자치의 축소 ← 2015년, 학교 교육법 개정
2 . 상근 교원의 채용 인사
: 기존의 학과 자치 = 교수회의 투표를 부정, 학장 재량 증가, 교육 연구 심의회 (학장 임명)가 독점
예) 지방 자치론 관련 논문이 없어도 지방 자치론 담당 교수 가능, 셰익스피어 전문 연구자임에도 영문학과 강사로 채용되지 못함 등
3. 시「중기 목표」(5 개년) →대학「 중기 계획」,「연도 계획」→ 평가 위원회에 의한 법인 평가 (매년도 / 5 년)
대학 기준 협회에 의한 교육 연구 평가 (5 년)
> PDCA 사이클에 의한 대학「경영」으로. 학내에서는「규정」이 급증하고, 상사에 의한 지휘 명령 계통의 명확화가 진행됨.
「교원 평가 제도」의 도입 (단, 교원 평가와 급여를 연동시키지는 않음)
4. 수입 총액 30.6 억엔 중 「입학 검정료 + 입학금 + 수업료」 수입이 19.4억엔 > 사립 대학에 가까운 재정 구조로.
시로부터의 운영비 교부금 6.0억엔 (그 중, 시설 정비비 0, 시설 정비 이외 6억엔)
기존의 지방 교부세 (대학 분) (국가 →시 → 대학)이 실질적 10 % 정도 감액
수탁 연구 등 수익 0 / 기타 5.2억엔 (교실 임대료 수입 등)
자산 수익 : 「대학 기금」이 「시 기금」으로 변동 (시설 정비는 시의 동의없이 할 수없도록)

자기소개 2 – 3

- **쓰루 문과 대학 법인화 이후의 변화 ー ー "대학다움 '의 상실**

4 – 2 지출 총액 중 인건비 15.8억엔

＞임원 △ , 교원 ▼ (젊은 연구자· 비상근직 증가), 직원 ▼ (비상근직 증가)

관리비 7.6억엔, 교육 연구비 6.9억엔

※입학 검정료 （일반 입시）18000엔,（추천입시）25000엔

입학금 （쓰루 시민）14만엔,（시외 출신자）28만엔

수업료 반년에 26만엔（1년 52만엔）→ 이 금액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대학 중 하나에 속함.

법인화 후에도 인상 없음.

5.「개혁」에 의한 대학의 목적 변질

「인문학 탐구」로부터「교원 양성계 대학」으로 ← 문부과학성의 대학 차별화 정책（국제연구／지역공헌 등）

「국제」를 강조 →2017년에 「국제 교육학과」개설（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원 양성）、

2018년 예정의「학교 교육학과」（←문부 과학성・현교육위원회와의「연계」강화）

사회학과 폐지 구상（「사회과학」에서「지역에서의 실천」으로）←아베 정권의 「지방 창출」정책

자기 소개 3

- **도쿄 자치 문제 연구소는？**

➢ 혁신계 · 진보파의 지방 자치 싱크 탱크 (NGO의 일종), 1983년 결성
➢ 전국 지자체 문제 연구소(1973~)의 로컬 연구소 네트워크 중 하나(47도도부현에 34개 연구소)
➢ 1957년 전일본 자치 단체 노동 조합의 지방 자치 연구 활동 (자치 노조 · 자치 연구소), 지방 공무원 중심
➢ 1960 년대 초반 반공해 · 복지(반독점) 주민 운동의 활성화 → 연대하는 지자체 노동자 · 연구자의 운동
➢ 1973년 주민 운동 (시민 사회) + 지자체 노동자 + 연구자에 의한 「지자체 문제 연구소」결성
➢ 1979년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혁신계가 패배 → 혁신 도정 상속을 목표로 한 3 자의 운동
➢ 1983년 도쿄 자치 문제 연구소 결성（「지자체」가 아닌「자치」）
정책적으로는 반신자유주의 ·「복지와 환경과 평화」、정치적으로는 혁신계 야당의 통일을 중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우파」도정 (1999-2012)에의 대안 모색.
➢ 2011년 와타나베 오사무(渡辺治) · 신도 효우(進藤兵)
「도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복지와 환경의 도시 구상」(이와나미 서점, 2011 년)

서울 시립 대학과의 비교를 위해 – 수도 대학 도쿄 1

- 1929년　도쿄 부립 고등학교（7년제）
  부립의 공업 전문 학교, 이공 전문 학교, 기계 공업 전문 학교, 화학 공업 학교,
  여자 전문 학교
  (전쟁 중）1943년 도쿄부가 도쿄도로 변경됨 /（전쟁 후）49년 대학 제도 개혁
- 1949년　도쿄 도립 대학（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 교양부와 인문학부・이학부・공학부)
- 　53년　대학원 설치, 57년 법경학부
  도립과학기술 대학, 도립 보건 과학 대학, 도립 단기 대학
- 1977년　도시 연구 센터(내의 도시 연구소)
- 1991년　도내의 교외(타마 지역)로 이전
- 2003년　4월,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가「새로운 대학」을 공약, 당선
  4대학 통합・재편을 목표로 하는 지사 측의「신대학 구상」에 대하여, 교수회・학생
  자치회가 반대 운동, 교수 사직
  도립 대학 무너뜨리기에 반대하는 시민 운동「도립 대학을 생각하는 도민회」발족
- 2004년 9월　문부과학성이 새로운 대학 설치를 인가함

서울 시립 대학과의 비교를 위해 – 수도 대학 도쿄 2

- 2005년 4월　「수도 대학 도쿄」발족(도쿄도가 설치한 지방 독립 행정법인, 전교원 임기제)
  (도시 교양・도시 환경・시스템 디자인・건강 복지학부, 로스쿨, 비지니스 스쿨)
- 2011년 「도쿄 도립 대학」은 폐쇄
- 2012년　이시하라 지사 퇴임
- 2016년　교원 노조 · 학생 자치회의 운동을 통해 임기제를 사실상 폐지, 학부 편성도 개선
- 학생수 6910명(여자 2621명), 대학원생 2265명(667명), 유학생 476명, 교원 683명(130명), 직원 450명(256명), 4개 캠퍼스・ 6 시설, 면적 46만㎡, 시설 27만㎡
- 입학금 - 도쿄도민은 14만엔, 이외는 28만엔/수업료 연간 52만엔(로스쿨은 66만엔)
- 수입 총액 279억엔(운영비 교부금 184억엔, 학비 56억엔, 외부 자금 21억엔)
- 지출 총액 266억엔(교육 연구 경비 154억엔, 관리비 88억엔 등)

【참고】대학수 : 국립(대학 86, 고등 전문 학교 51), 공립 125, 사립 969(78%)
학생수 : 국립(대학 61만명, 고등 전문 학교 2만명), 공립 15만명, 사립 223만명(74%)

학비 반액화의 경제・사회적 배경　1

1. 고등 교육의 방향

- 엘리트 단계 : 엘리트 예비군의 특권으로서의 학비 면제（19세기 유럽）
- 매스 단계(Critical Mass 단계) : 고등 교육의 보급＝고학력화
  국가 재정 내에서의 교육에의 권리 실현(학비 감면)
  계급간 이동에 의한 국민 통합과 고학력화＝생상력 향상
- 유니버셜 단계 : 전국민에의 고등 교육 개방
  인권(여성・마이너리티의 국민 통합)
  지식 기반 경제에 있어서의 직업 자격으로서의 대학 졸업

학비 반액화의 경제・사회적 배경　2

2. 경제・국가 구조의 4 개 단계

1) 산업 혁명＝자유주의 국가 단계(19세기 서유럽 북미), 시민사회(엘리트 단계의 대학)와 노동자 세계의 구별
지배층 속에 있는 계층간 평등에의 근원적 혐오・공포 【유료론 a】

2) 환대서양 포드주의 경제 = 케인즈 주의적 복지 국민 국가 (북미 서유럽 1930년대 - 1970년대 말)
경제 = 재정 흑자를 사용한 복지 (국민 통합 / 인권)로서의 학비 무상화 【무상론 a】
환태평양 도요타 주의 경제 = 리스트 주의적 취로 국민 국가 (일본, 1957-1993)
취로 (입신 출세)에 대한 개인 투자 =「수익자 부담 」론 【유료론 b】
산업 기반 투자 우선의 국가 재정 > 고등 교육 예산에의 제약(사립대학의 대폭 확대【유료론 c】

3. 글로벌화하는 지식 기반 경제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 주의적 취로・탈국민적・탈국가화
(북미 서유럽, 1980년대~00년대)
현대 과학 기술의 거대화＝거액의 대학・연구 예산, 글로벌형・지식 산업형의 새로운 학위의 필요
→ 치솟는 고등 교육 예산 → 취업 중시 (개인 투자 이론의 등장) → 등록금 상승 (미영국 형) 【유료론 d】
→ 국민적 경쟁력 = 생산력 향상을 위한 국가 투자로써 학비 면제 (북유럽 형) 【무상 론 b】
혼합형 (제조업/지식 산업) 동아시아 경제권 = 신자유주의적 탈국민적・탈국가화) (일한, 1990 년대 ～)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감세・작은 정부) 【유료 론 e】

학비 반액화의 경제・사회적 배경　3

4．2008년 이후 경제의 금융화・경제 위기 = 위기 관리의 정치
대학의 법인화 (주주 중심형 경영 모델의 도입) 【유료론 f】
젊은 세대 전반의 비정규 노동력화, 200년만의 빈곤화
시민 사회 NGO・노동 운동 (계급적 운동)의 재발견
→ 탈빈곤 운동 (최저 임금 15 달러・학비 반감) 【무상론 c】
(기본 소득 basic income의 일종으로써 학비 무상화)
(박원순 시정, 샌더스 선풍과 뉴욕주, 일본의 「파견촌」・최저 임금 1500엔 운동 등
― 서구에서는 「21 세기형 좌익」,「급진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라고 불림)

공립 대학 학비 반액화의 3가지 인풋（input）

1. 위로부터의 인풋（지자체 수장・의회 주도의 무상화）
학비 반액화를 주장하는 도도부현 지사・시장이 당선되고 공약을 실행.
도도부・시의회에서 학비 반액화를 요구하는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 조례 또는 예산으로 반액화를 실현
(일본 헌법 92조의 지방 자치　시빌 미니멈(civil minimum)에 의한 대학 무상화/내셔널 미니멈)
2. 옆에서의 인풋 (시민 사회의 학비 무상화 운동)
학비 반액화를 요구하는 학생 운동과 시민 운동의 힘이 강하고, 지사 · 시장 · 의회가 그 요구에 응답하여 반액 실현
(일본 헌법 26조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 UN 협약 · UNESCO 인권으로서의 고등 교육)
3　안으로부터의 인풋（대학으로부터의 내발적 무상화）
교수회, 학부원생 자치회, 직원 노조로부터 반액화 운동이 일어나고, 대학 집행부가 지사 · 시장 · 의회 · 여론에 반액을 호소하여 실현
（일본 헌법 23조의 학문의 자유 - 교육 내용에의 국가 불개입/교육조건정비에 국가 관여)

공립 대학 학비 반액화의 3가지 행정적 제도

1. 대학 학비 그 자체를 반액화
   → 학비에 대한 제도 설계 = 이론의 변경이 필요함
2. 학비는 그대로 두고, 모든(or대상이 되는) 학생에게 반액 면제
   (종래의 생활 빈곤 학생 = 전액 면제자는 그대로)
   → 2 – 1. 학비제도의 탈빈곤(post-poverty) 이론 추가
   → 2 – 2. 대학의 경쟁력 향상(competitiveness) 이론 추가
3. 학비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장학금 제도(급부형 = 변제 불요, 무이자)를 창설하여 모든(or대상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
   → 3 – 1. 학비 제도에 기초 소득(basic income) 이론 추가
   → 3 – 2. 성적 향상(workfare) 이론 추가

공립 대학 학비 반액화의 2가지 재정적 제도 1 (재원 구성)

- 일본 대학의 주요 재원 구성

1. 대학의 자체 수입 – 1) 학비(수업료, 입학금, 입학검정료)
   2) 외부 자금(기부, 정부・기업・재단 등으로부터 경쟁적 자금, 특허 수입 등)
2.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국립 : 운영비 교부금・사학 조성금
   공립 : (직영형) 지방 교부세(대학분)
   (법인형) 운영비 교부금
3. 지자체의 보조금 공립 : 일반 회계로부터의 투입
   사립 : 사학 조성금 등

공립 대학 학비 반액화의 2가지 재정적 제도 2 (학비 면제의 구조)

학비 면제 제도

- 학비 수입 총액＝학비 A엔＊입학자 총원 B명(←대학별「학비・요금 규정」에 따라 결정)
- 수업료 수입 총액의 C%를 면제 재원에 충당(←대학별 자체 결정)
- 전액 면제(A엔분), 반액 면제(1/2A엔분), 지불 유예
- 학비 면제 대상자수 D＝ABC/100A(최소)에서 ABC/50A(최대)
- 대학별, 학기별로 대학 사무국이 전액면제・반액 면제・유예 희망 학생을 공모
- 대학 사무국이, 생활 보호 기준(←생활 보호법에 의한), 그 외 기타(성적 등？) 이유를 참고하여, 「수업료 면제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희망 학생에 대하여 생활 빈곤도를 점수로 매긴 순위 리스트 작성
- 학내의 학생 생활 위원회(학장・교수회 산하에 놓임)가 서류 심사를 통해 순위 리스트의 빈곤도가 높은 학생순으로 면제 대상자를 확정. 교수회・학장에 의해 승인.

※학부원생 자치회의 참가는 없음

공립 대학 학비 반액화의 2가지 재정적 제도 3 (재원 문제)

- 반액화의 2가지 방식

  1. 기관 보조 – 대학에게 학비 수입 총액의 반(AB/2)액을 지자체 또는 국가가 보조
  2. 개인 보조 – 개별 학생에게 학비의 반액을 지자체 또는 국가가 보조(A /2＊B명)

- AB/2의 재원을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1. 지자체의 일반 회계로부터 충당 → 지역 사회에서의 정치력 관계에 의존
  2. 정부의 교부금을 확대 → 법률의 제정・개정 → 국민 사회에서의 정치력 관계에 의존
  3. 대학 외부 자금의 확대 – 1) 기부 제도 또는 재단화 : 부유층에 의존
     – 2) 기업 자금 또는 특허 수입 : 신 자유주의에 접근

공립 대학 학비 반액화의 2가지 아웃풋（output）

1. 전학생을 대상으로 함 : 일률적 반액화
   ←보편적(universal)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 설계
2. 제한적 반액화
   2－1) 소득 제한(고소득층 출신 학생은 면제 없음)
   ←선택적(selective) 복지를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
   2－2) 출신・재주 지역 제한(출신지 학생만 반액화)
   ←지역 주의(regionalist) 를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
   2－3) 성적에 의한 제한(우수한 학생만 반액화)
   ← 근면 주의적 복지(workfare)를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
   2－4) 기타

공립 대학 학비 반액화의 정치력 관계 1

- 개별 공립 대학의 학비 결정의 메카니즘

0. 국립 대학의 경우 : 법인화 후 법률・정령 등에 의한 상한・하한 설정은 없어졌으므로 개별 대학의 이사회・이사장이 자주적으로 결정 가능. 그러나,

0 – 1) 내각・문부 과학성에 의한「중기 목표」→ 대학별「중기 계획」수립 과정에의 실질적인 정부의 유도

0 – 2) 국립 대학 협회에서의「횡단적 비교」의 관행

1. 공립 대학의 경우

1) 직영의 경우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지방 의회에서 의결됨

2) 법인의 경우, 개별 대학의 이사회・이사장이 자주적으로 결정 가능함. 그러나,

2 – 1) 국립대학의 학비를 준거로 한 관행

2 – 2) 지자체에 의한「중기 목표」→ 대학별「중기 계획」수립 과정에의 실질적인 지자체(지사・시장, 지자체 관료제, 지방의회)의 개입

2 – 3) 공립 대학 협회에서의「횡단적 비교」의 관행

공립 대학 학비 반액화의 정치력 관계 2

2. 대학내에서의 결정 메커니즘「학비・요금 규정」에 의해 결정

대학 사무국의「규정」안 → 학장에 의한 교수회에 제안 ★ →(3 자 협의 ★) →

교육 연구 심의회에서의 심의 ★ → 경영 협의회에서의 심의 → 이사회에서의 심의 → 이사장에 의한「규정」결정

다만, ★ 표시가 있는 것은 민주적인 대학에 한정됨. ★ 표시의 과정에서 학부원생 자치회, 교직원 노조, 학내의 자발적 운동이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3. (1 − 2 − 2 →) 지자체에 의한「중기 목표」의 결정 메커니즘

− 1) 지자체의 재정 상황

− 2) 지자체 관료제에 의한 예산안의 작성

− 3) 지사・시장에 의한 예산안의 확정　　지사・시장의 정치적 입장

− 4) 지방 의회에서의 결정　　대학 예산을 둘러싼 정치력 관계(찬성파・반대파)

− 5) 지역 사회의 학생 운동, 시민 운동, 여론 등의 사회적 힘의 관계

공립 대학 학비 반액화의 정치력 관계 3

- 학비 반액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력 관계

  1. 혁신계(진보파) 지사・시장과 혁신 다수파의 지방의회

     →지사・시장・지방 의회 선거 형태의 민주적 활용

     지자체 재정에 제약이 있더라도 지자체 관료제를 중립화시킴

     →지자체의 정책・예산 형성 과정에 시민 사회의 참가

  2. 시민 사회(지역 사회)의 진보파의 헤게모니

     →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힘의 관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3. 대학 내부의 진보파 연합의 헤게모니 (교수회・학생 지자체・직원 노조 → 학장에게 반액화를 단행시킴)

     → 대학 내부 운영 형태의 민주화

- 대학 협회의 중립화

  ⇒ 정부・문부 과학성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위헌・위법론에의 우월

토론 1

제1보고(정병호 교수님)에서:

1. 한국 대학에서의「반값 등록금 도입」은 어떤 제도의 설계=이념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2.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진보파의 지지·(박원순)시장」과「학내의 교수회·학생·교직원(대학의 지배 구조)」간의 의견 차이는 없습니까?
3. 반값 등록금 도입의 결과, 서울 시립 대학교의 학생 한명당 교육비가 오히려 저하되어 학생들의「학력수준」도 그다지 상향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그 원인은 서울시의 대학을 위한 재정 투자가 반값 등록금에 너무 편중하여 다른 교육 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이용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4. 청년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학·지자체(정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재편해야 할 것인가?

토론 2

제 2보고(박거용 교수님)에서:

1. 1989년 이후 한국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책이 2000년대에 들어서며 반전하여, 반액 등록금에 대한 구상이 보수 정당에서도 등장하게 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은 무엇인가.
2. 한국에서의 반액 등록금을 둘러싼 다양한 논거(서울 시립대학의 경우,「사회 공헌」론)와, 그에 반대하는 측의 다양한 논거를 비교하여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는가.
3. 반액 등록금 외에, 청년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지자체, 정부 각각의)이 필요한가. 또한, 한국의 대학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지배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해야 할 것인가.